평균 경쟁율 1.91대1…역대 가장 많은 45명 무투표 당선

광주·전남 지방선거 826명 등록

광주 구청장 1.8대 1
전남 시장·군수 2.72대 1
3선 이상 다선 도전 후보 3명

광주·전남지역의 '풀뿌리 민주주의 일꾼'을 뽑는 6·1 지방선거 후보 등록자는 총 826명으로 집계됐다. 광주에서는 188명, 전남에서는 638명이 각각 공식 등록을 마쳤다. 광주·전남에서 모두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는 이번 선거 평균 경쟁율은 1.91대 1이다. 이는 지난 4년전 지방선거의 2.28대 1 경쟁률보다 낮은 수치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후보등록 마감 결과, 이 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광주시장 선거에는 국민의힘 주기환, 더불어민주당 강기정, 정의당 장연주, 기본소득당 문현철, 진보당 김주업 후보 등 5명이, 전남도지사 선거에는 국민의힘 이정현, 민주당 김영록, 진보당 민점기 후보 등 3명이 후보 등록했다.

또 광주교육감에는 박혜자·정성홍·강동완·이정선·이정재 후보 등 5명, 전남교육감에는 김대중·김동환·장석웅 후보 등 3명이 이름을 올렸다. 광주 5곳 기초단체장 선거에는 9명이 등록해 전체 경쟁률 1.8대 1을 보였다.

광주 동·서·남·북구청장은 2명씩 등록했고, 광산구청장은 민주당 박병규 후보 단독이다.

전남 22개 시장·군수 선거에는 60명이 등록해 2.72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나주·영암·무안이 5명씩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의원은 광주 32명, 전남 93명이 등록해 각각 1.6대 1, 1.7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기초의원 후보는 광주 109명(경쟁률 1.8대 1), 전남 411명(경쟁률 1.9대 1)이다.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는 광주 8명, 전남 11명, 기초의원 비례대표는 광주 20명, 전남 57명이 등록했다.

◇총 45명 무투표 당선…역대 가장 많아=이번 선거에서는 광주·전남 지역 출마자 가운데 본투표를 하지 않고도 45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지방선거 후보 등록 결과 광주·전남 20개 지역 42개 선거구에서 총 45명이 무투표 당선자가 됐다.

민주당 강세 속에서 군소정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며 역대 지방선거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다.

기초 지자체장 후보 가운데 광산구청장 박병규(55) 후보, 보성군 김철우(57) 후보, 해남군수 명현관(59) 후보가 각각 단독으로 입후보해 무혈입성했다.

보성·해남 군수에 당선된 두 사람은 현직 군수로 무난히 재선에 성공하게 됐다.

광역의원의 경우 광주 5개 구의 선거구(11곳), 전남 15개 시군의 선거구(37곳)에서 무투표 당선이 쏟아졌다.

광주 동구(홍기월·박미정)와 남구(서임석·임미란·박희율), 전남 화순군(임지락·류기준)과 무안군(정길수·나광국)에서는 모든 광역의원 자리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기초의원의 경우 광주에서는 무투표 당선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전남 순천 자선거구에서 김영진·박계수 후보자, 나주 가선거구에서 김해원·최문환·한형철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됐다.

무투표 당선된 후보는 14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6월 1일 선거가 끝나면 당선인으로 결정된다.

◇무소속 후보도 '쟁쟁'…3선 이상 다선 도전 3명=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목포, 장흥, 강진, 영광 등 전남 4개 시·군에서 전·현직 시장 또는 군수의 대결이 성사되면서 무소속의 선전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목포시장 선거에서는 민주당 공천을 받은 김종식 시장이 무소속 박홍률 전 시장과 4년 만에 다시 붙었다. 장흥군수 선거에서는 무소속 정종순 군수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김성 전 군수가 경쟁한다. 강진군수 선거에서는 이승옥 군수와 강진원 전 군수가 나란히 무소속으로 출마한다.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민주당 김준성 군수와 무소속 강종만 전 군수가 대결한다. 무안군수 선거에서도 민주당 최옥수 후보와 현 군수인 무소속 김산 후보가 맞붙고, 장성군수 선거에는 민주당 김한종 후보와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하는 현직 군수인 유두석 후보가 1대1 대결을 펼친다.

한편 6·1 지방선거에서 전남 6개 시·군의 단체장 후보가 3선 이상 다선 도전에 나섰다. 목포시장 후보로 등록한 김종식(72) 현 시장은 완도군수 3선에 이어 목포시장 재선 도전에 나서면서 사실상 5선 단체장에 도전하고, 신안에서는 박우량(67) 후보와 장성군수 유두석(72) 후보는 '징검다리' 4선에 도전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지방선거 투표하세요"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참여 독려를 위해 15일 오후 광주 남구 양림동 펭귄마을 공예거리에서 공명선거추진단체와 함께 투표참여 홍보 캠페인을 하고 있다.

與, 이재명 민주당 고문 겨냥 불체포특권 제한법 추진 본격화

권성동,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한다.

'방탄 출마'를 막겠다는 취지의 이 개정안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상임고문을 겨냥한 것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헌법에서 규정한 취지에서 벗어나 '범죄특권'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원내대표 자격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요건·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행 국회법상)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토록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본회의 의사일정을 잡지 않을 경우 체포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48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하고, '표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체포동의안은 가결된 것'으로 보도록 해 '방탄국회 꼼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체포동의안 표결을 현행 무기명 투표에서 기명 투표로 전환하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인천 계양을 출마에 대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노린 출마라는 지적이 많다. 정말 억울하다면 저희의 개정 법률안에 적극 찬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난 대선 민주당과 이재명 전 후보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공약했다. 이제와서 국회의원 방탄특권 내려놓기에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명분도 없다"며 민주당과 이 고문을 압박했다. 권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향후 의원총회 등 당내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당론 발의 형태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내일 국회 운영위…대통령실 인사 공방 예고

국회 운영위는 오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운영위는 17일 오후 3시 전체회의에서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다. 운영위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지도부로 구성돼 있다.

추경 예비심사가 1차 목적이지만,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참석할 예정인 만큼 최근 불거진 대통령실 인사 논란에 대한 공방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검찰 재직 시절 성 비위로 징계성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윤재순 총무비서관과 동성애와 위안부 피해자 발언 논란 끝에 사퇴한 김성회 전 종교다문화비서관, 대통령실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발탁된 점 등을 놓고 집중적인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장·차관 광주·전남 딱 1명

장·차관급 인선 마무리
조용만 문화부 2차관 유일

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은 단 한명만 발탁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15개 부처 차관 20명을 인선한데 이어, 13일 장관급인 국가보훈처장과 차관· 청장 등 20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 2차관 등을 제외하고는 장·차관 인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하지만윤석열 정부의 18개 부처 장관 및 장관급은 물론 40명에 이르는 차관·청장급 인선에서 광주·전남지역 출신 인사는 순천 출신의 조용만 문화부 2차관이 유일하다. 여기에 차관급인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인선에서도 광주·전남 출신이 전무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전남 패싱'이 뚜렷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능력을 최우선으로 인선에 나섰다는 주장과 '공정과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이 무색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할 창구가 사실상 막히면서 지역 현안 사업 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윤 정부 내각에 광주·전남 출신이 철저히 배제되면서 국민 통합 기조가 퇴색, 국정 운영 동력도 그만큼 약해지지 않느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특히, 윤 정부의 '광주·전남 패싱'에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 참석 등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기념식의 메시지는 진상 규명과 국민 통합에 방점이 찍혀야 하는데 초대 내각 인선은 이와 상반된 결과이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내각에 광주·전남 출신이 단 한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국민통합의 의지가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라며 "윤 정부의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배려를 찾아보기 어려운 윤 정부의 일방통행은 참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질병관리청
2022.4.26. 기준
안전하고 건강한 일상을 위한
개인방역 6대 중요수칙
수칙 1 코로나19 예방접종 완료하기
수칙 2 올바른 마스크 착용으로 입과 코 가리기, 실내 음식물 섭취 등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가능한 짧게
수칙 3 흐르는 물에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수칙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수칙 5 사적 모임의 규모와 시간은 가능한 최소화 하기
수칙 6 코로나19 증상 발생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